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재입소 반대!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자	2021년 1월 14일 (목) 오후 1시
발신 (담당)	장애여성공감(이진희 010-5352-7235)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우정규 010-8581-2129)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김수경 010-2408-1410)
분량	총 5매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재입소 반대!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월 14일 (목) 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청앞
- 주관 : 장애여성공감
- 공동주최 : 사)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서울시 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원에서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확진자 70여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비확진자는 며칠 전 동대문과 가평의 숙박시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산조치된지 채 1주일도 되지 않았으며, 자가격리 기간 2주를 채우지도 않은 1월 14일 신아원 소독을 마무리한 후 거주인들의 시설 내 복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거주시설로의 복귀는 또다시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역 차원에서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확보가 불가능한 거주시설의 조건 자체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거주인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아원으로의 재입소가 아니라 긴급 분산 조치 유지 및 긴급 탈시설 이행이 필요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단수용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와 예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적 본질이 드러났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탈시설이 보다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전하기 위해 신아원을 비우고 긴급분산조치를 진행했는데, 재입소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었습니다. 신아원 재입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12월 29일 긴급분산조치와 탈시설 지원에 대한 합의안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호트 격리 해제 뿐 아니라 치료와 자가격리 이후 거주인 전원에 대한 개인별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1년 1월 14일 (목) 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사회 : 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
서기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진희(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붙임 1. 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긴급탈시설 이행 요구안

붙임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요구안

붙임 3. 서울시 코로나 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 끝.

붙임 1] 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긴급탈시설 이행 요구안

1.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집단감염에 따른 '긴급분산조치' 유지
 - 1-1. 확진자 치료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
 - 1-2. 자가격리 시 필요한 생활 및 방역 물품 지원 및 예방 대책 수립
 - 1-3. 자가격리된 비확진자에 대한 장기 주거공간 마련

2.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거주인 전원 '긴급탈시설' 이행
 - 2-1. '긴급분산조치' 이후 '긴급탈시설'이행 계획 수립
 - 2-2. 긴급분산조치 이후 코로나19 감염기간에는 신아원 복귀 불가
 - 2-3. 치료와 자가격리 이후 거주인 전원에게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 2-4.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에 필요한 예산 반영(보건복지부, 서울시, 송파구청)

3. 긴급탈시설 이행 이후 탈시설지원 이행 연결
 - 3-1.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지원인력 체계 마련
 - 3-2. 임시거주공간 확대 제공 및 자립생활주택, 장애인지원주택 적극 확보 및 연계
 - 3-3. 긴급탈시설 이행 기간, 신아원 종사자 연계하여 서비스 인력제공
 - 3-4. 긴급탈시설 이행 기간동안 지원서비스 제공은 신아원에서 책임
 - 3-5. 긴급탈시설에서 탈시설로 이행 과정에서 서비스지원 책임 기관에 대한 공모
 - 3-6. 2020.12.10.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에 근거한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에서 이사회 의결을 전제로 지역사회 장애인주거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참여

4. 민관대책기구 구성 및 실행
 - 4-1.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긴급 탈시설 이행관련 계획수립과 이행, 점검 등 역할 수행
 - 4-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 서울시, 송파구청, 신아원, 해당보건소 등 참여

붙임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요구안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요구안

1.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 대한 '긴급분산조치' 실행 지침 마련

- 2020.12.29. 서울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의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재난적 상황인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긴급분산조치'를 이행하여 신아재활원 공간을 비우는 것으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 하였음.

- 서울시의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방대본의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코호트격리'라는 원칙을 폐기하고 즉각적인 '긴급분산조치'를 통해 인간으로 존엄한 삶의 가치를 지켜야 할 것임.

2. '긴급분산조치' 기간은 코로나 1단계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집합금지명령 수준의 지침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적용되어야 함.

- 코로나 K-방역이 놓치고 있는 것은 D(For the Disabled)-방역이다. D-방역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생활시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긴급분산조치' 이후 집단거주시설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코로나 감염의 취약하고 대규모 집단감염을 발생시키는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이행이 필요함.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의 면담 요청

- 현재 긴급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는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긴급분산조치'의 빠른 결정을 위한 면담을 공식 요청함.

- 신아재활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 방침을 중단하고 '긴급분산조치'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우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앞 농성과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즉각적인 면담투쟁을 진행할 것임.

붙임 3] 12월 30일 서울시 코로나 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I·SEOUL·U <small>서울특별시</small>	<h2 style="margin: 0;">서울특별시</h2> <div style="text-align: right;">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div>
수신 (경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제목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이용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게 대하여 재난적 상황인 집단감염 긴급조치로 '긴급분산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시설의 공간을 비운다.
- 서울시는 확진 판정받은 거주인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음성 판정 받은 거주인은 긴급 임시거주공간, 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을 마련하여 분산한다.
- 긴급 임시거주공간에서 거주기간은 일차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으로 진행하고, 이후 코로나 1단계로 떨어지기 전까지 기간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요청한다.
- 해당시설 거주인에 대하여 긴급 임시거주공간에서 개별접촉이 가능한 상황을 검토하여 개인별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서울시 탈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대형시설인 해당 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인 탈시설 계획을 이행한다.
- '긴급분산조치'에 대한 이행과 점검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서울시 탈시설민관협의체에서 진행한다.
- 서울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를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에 반영한다. 끝.